

주행 중 화재 잇따라… “소화기 비치·신속 대피 필요”

광주·전남지역 3년간 990건 발생
5인 이상 모든 차량 ‘소화기’ 의무
소방 “주행 중 화재 특히 주의해야”

광주·전남지역 도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차량 내 소화기 비치를 강조하며,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정차와 대피, 소방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2일 광주 북부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6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동립동 호남고속도로 동립IC 부근에서 달리던 5톤 화물차 적재함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46분만에 진화됐고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일대 교통 정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7시6분께 전남 여수시 신기동 한 도로에서는 주행 중이던 스포츠 유틸리티(SUV)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17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엔진룸이 타면서 269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40분께는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1톤 화물차 적재함에서 불이 나, 6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손가락에 2도 화상을



2일 오전 9시26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호남고속도로 동립IC 부근에서 주행중이던 5톤 화물차 적재함에 불이 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입었다. 소방은 A씨가 버린 담배꽂초 불씨가 적재함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매년 차량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990건에 달한다. 광주에서는 247건(재산피해 16억여원), 전남에서는 743건(재산피해 74억8000만원)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도 각각 광주 10명, 전남 15명이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차량 화재가 주로 △엔진

과열 △전기 계통 문제 △흡연 등 작은 불씨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차량은 각종 연료와 오일, 전기 계통 등 가연성 물질이 집중돼 있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특히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하면 차량을 즉시 갓길에 정차한 뒤 차량 밖으로 신속

히 대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차량 내부, 특히 운전석이나 조수석 하단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화기 비치는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였지만, 지난해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적용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대형마트나 소방용품 전문점,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주차된 상태보다는 운행 시 화재가 일어날 경우가 높고 주행 중 엔진 주위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특히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정차하고 대피할 것을 강조했다.

백은선 동신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엔진 과열 등 이상 증상으로 발생하는 차량 화재는 주차 상태보다 주행 중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화재 발생 즉시 정차하고 대피하는 것이 우선이며, 소화기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선에서 진화를 시도하고 곧바로 소방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광주·전남교육청 “직접 관련성 낮아” “금호타이어 화재 대응에 책임 있는 자세 취해야”

‘리박스쿨’ 논란 확산

늘봄학교 운영 긴급 조사 착수 전체 프로그램 전면 점검 예정

극우 성향 역사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온라인 여론 조작 및 정치적 개입 의혹이 확산되며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우려가 커졌지만, 두 지역 교육청은 해당 단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일 광주·전남교육청은 뉴스타파 보도를 계기로 ‘리박스쿨’과 늘봄학교 운영과의 관련성을 긴급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문제점은 없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청은 리박스쿨 논란이 불거지자 즉시 국장급 이상 간부에게 관련 상황을 전달하고, 관내 늘봄학교 강사 채용 방식 및 자격 조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광주는 민간 위탁기관 강사 채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민간 자격증이 아닌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만 등록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리박스쿨과의 관련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전남교육청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 늘봄학교는 리박스쿨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전남지역 늘봄학교 운영

은 위탁기관을 통해 강사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도내 모든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리박스쿨 관련 프로그램이나 강사는 확인되지 않았고, 어떤 형태의 연관성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위탁기관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외부 기관의 이력과 운영 배경을 사전에 면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동 중인 늘봄학교 강사는 약 9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3년 말 기준, 광주 시내 초등학교 155곳에 총 3833명의 강사가 채용됐고, 7363개의 늘봄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전남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총 5395명의 강사가 8797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교육청은 교육부의 전수조사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모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같은 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늘봄학교 운영에 투입된 예산 규모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신속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정유철 기자

수익원대 조합원 아파트 분양 사기 50대 구속

아파트를 싸게 분양하겠다고 사기를 쳐 수익 원을 빼돌린 50대가 구속됐다.

2일 광주 광산경찰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싼값에 팔겠다고 속인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광주 북구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팔 것처럼 속여 피해자 3명에게 2억원씩 총 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조합원 물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했지만 실제 소유 여부는 파악할 수 없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정준 기자

광산구, 노사민정 대책회의 개최 주민 보상·공장 정상화 등 논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한 지역사회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기 위해 노사민정과 주민이 함께하는 대책회의가 열렸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2일 오후 구청 2층 상황실에서 ‘금호타이어 화재 대응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노동조합·지역주민·행정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 보상과 고용 위기, 공장 정상화 및 지역경제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타격이 우려된다”며 “대주주인 더블스타가 이 사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등의 의견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창구와 대책위 구성에 대한 의견

도 제시됐다.

조광수 광산구노사민정협의회장은 “공장 노동자와 협력업체 인력만 해도 총 1만명에 달한다”며 “더블스타는 공장 재건, 합병 이전, 폐쇄 등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떤 방향을 택할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광주 차원에서라도 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노사민정이 한 자리에 모여 일관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안전 측면의 문제 제기도 나왔다. 최지현 광주시의회환경복지위원장은 “광주시민이 화재로 인해 향후 어떤 피해를 입르지 우려된다”면서 “화재 당시 전소된 화학물질의 정보와 유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장은 “광산구는 심폐·호흡기질환 표본조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당시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재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대한 금호타이어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구청장은 “더블스타는 대주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주민과 상인 보상, 노동자 생활 대책, 금호타이어의 정상화와 지역 상생 방안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사측에서 공장 이전 등 구체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며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 이 사태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준 기자

“영유아 유보통합 시범사업, 광주 기준 미달… 재점검 해야”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 모임 일부 미참여·중도 이탈 등 지적

광주에서 추진 중인 영유아 유보통합 시범사업이 잇따른 운영 차질과 행정 미비로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2일 성명을 내고 “광주지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공립유치원 미참여, 일부 사립유치원의 중도 이탈 등으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다양한 통합 모델을 실험하겠다고 추진한 유보통합 시범사업

의 기본 취지와 달리, 광주에서는 보편성과 포용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특수학급과 장애 영유아는 배제됐고, 사립유치원 중심으로만 운영되면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일부 사립유치원이 유아 모집 부진과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쇄를 결정하고 시범사업에서 이탈한 사례가 지적됐다.

단체는 “해당 기관이 관련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이 이를 승인했고, 감사기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행정적 허점을 꼬집었다.

또한 최근 3년 내 감사 처분 이력이 있

는 기관이 가선정됐다가 소송 패소로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까지 발생하며, 선정 기준의 허술함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광주지역 영유아학교 시범기관은 유치원 1곳, 어린이집 3곳 등 총 4곳으로, 교육부가 권장한 최소 기준(유치원 3곳, 어린이집 3곳)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단체는 “기관 이탈과 지정 취소가 반복되는 현재의 구조로는 시범사업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어렵다”며 “교육부는 광주지역에 시범기관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광주교육청은 선정 과정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유철 기자